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우성



“전임자를 예우하는 문화 하나 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말 당선인 신분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장례식 때마다 전직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장례를 성

을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며 슬퍼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그후 3개월이 안돼 병상에서 생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장례식 때마다 전직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장례를 성

전임자를 편히 모시겠다더니...

대히 치러졌다. 적어도 장례만큼은 전직 예우를 확실히 한 셈이다.

그런 장례와는 달리 두 전직은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있다. 책임시절 그토록 열정을 바쳤던 햇볕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이 정부에서 크게 흔들리고, ‘잃어버린 10년’으로 홀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역점 사업인 세종시·혁신도시 시는 지금 어떤 꼴이 되고 있는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부·여당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 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을 필두로 정부·여권 관계자들이 장관고시 또는 법

개정을 통한 축소, 백지화 등을 들먹인다. 대통령도 “백년대계 정책에 타협은 안된다”는 말로 수정을 시사하더니 급기야 “정부 부처 대신 산업생산지화”를 꺼내든 상황이다.

그러나 세종시를 놓고 “백년대계 정책에 타협은 안된다”는 것이나 “산업생산지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국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과 지방이 모두 잘 사는 나라, 경쟁력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그

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가 통치권자에 따라 달라진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는가. 진정 세종시절 그토록 열정을 바쳤던 햇볕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이 정부에서 크게 흔들리고, ‘잃어버린 10년’으로 홀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대통령 스스로 후보시절 세종시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고 찬반논의, 특별법 제정 등 합의과정을 거쳐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가. 오죽했으면 여당의 박근혜 전 대표마저 “이렇게 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에게 무순

약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각을 세웠겠는가.

정책 일관성이 곧 백년대계

산업생산지화도 모순이긴 마찬가지다. 정부 생각대로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업을 유치하면 산업생산지화는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세종시 추진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이전 기피현상이 극심하다. 하물며 정부가 나서 세종시로 기업을 집중시키면 당초 목표했던 전국도의 균형발전은 달성할 수 없을 게 뻔하다.

세종시의 변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국감에서 드러나듯 나주혁신도시만 하더라도 한진, 농어촌공사 등 이전 대상 17개 기업이 대부분이 청사 설계 공모나 부지매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 그야말로 세종시 수정 여파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자에 대한 예우는 장례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진정한 예우는 그들의 혼과 열정이 담긴 정책을 계승,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 전직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법이다. 국가백년대계 또한 이런 정책의 연속성·일관성이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편집부국장〉 wskim@kwangju.co.kr

시설

혁신도시 사업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축소 및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전국 혁신도시 관련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1차관이 이 같은 정부 의지를 전

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 혁신도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론 여파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는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 비용을 확보해 놓고도 적자를 이유로 집행 행을 미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업 축소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의의의 표현이다.

이제 정부가 행동으로 나설 때다.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서는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들의 이전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차차 살펴 나 부지 매입 과정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답변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목표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독려해야 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보인다면 뚜렷한 이유없이 지방이전을 미루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지뢰밭’ 화물차 불법노숙 방치만 할 건가

화물차의 야간 불법주차로 인해 2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밤 광주시 북구 동림나들목 인근 편도 3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공무원 김모(51)씨가 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에 불법주차해 있던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김씨 부부가 숨지고 아들(16)은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숨진 김씨는 평소 성실한 업무처리로 신망이 두터운 공직자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의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사고위험이 클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좁은 도로나 커브길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지대의 불법 주차는 운전자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야간 불법주차의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불법주차 화물차 단속은 전적으로 구청 소관이라며 두 손을 놓고 있고, 구청은 인력·예산 부족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야간 불법주차의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없었다. 예견된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밤만 되면 광주시에 주요 간선·이면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길까지 화물차나 전세버스, 중장비 차량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던 경찰이나 구청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 일가족의 참사는 당국의 방관과 무책임한 행정이 부른 사고인 셈이다.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는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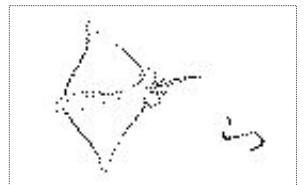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는 ‘도로

無等鼓

전라도 지역의 대소사에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흥어는, 그만큼 이름도 많다. ‘보초강박’에는 모양이 연잎을 닮았다 하여 하여(荷魚), 생식이 괴이하다 하여 해음어(海淫魚)로 기록된다. 전북에서는 간재미, 경북에서는 가부리·나무가부리, 전남에서는 흥해·흥어·고동무치, 함경남도에서는 물개미, 신미도에서는 간쟁이 등 지역마다 달리 부른다.

안(此節)의 법새 찌어든 찌어내도 돌아서면 밥 냄새처럼 피어오르는 가랑이 법새’로 표현하고 있다. 뽀뽀뽀 해도 흥어는 흑산도산을 최고로 친다. 흑산도산 흥어는 물살이 강한 곳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산보다 몸집이 크다. 겨울철 거센 물살에 알을 낳고, 이를 지키기 위해 씹없이 날갯짓을 하다 보면 미네랄을 듬뿍 머금은 육

흥어 대풍



이름 만만이나 없던 예기도 많다. 2009년 전 흑산도에서 흥어를 사서 돌아오던 신안 우이도의 흥어장수 문순득은 풍량을 만난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본 오키나와(당시 유구국)와 필리핀(당시 여승국), 마카오(당시 광동 동문), 중국을 경험한다. 이때 문순득은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조선시대 최초의 필리핀어 통역사로 조선왕조실록에 남는다. 김주영은 소설 ‘흥어’에서 술집어인과 눈맞아 집을 나간 바람둥이 아버지를 흥어에 비유하는가 하면, 시인 문혜진은 ‘흥어’라는 시에서 흥어 냄새를 ‘차

체미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 씨가 말라간다면 흑산도산 흥어가 지난 26일 흑산수협 설립 이후 66년 만에 하루 3천마리까지 잡혀 최대 위판량을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 한 백화점이 흥어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때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민들과 흥어 마니아들을 잔뜩 설레게 한 이번 대풍이 남획을 자제하고, 금어기를 운영하는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특별기고

박광태



지금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비해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보급하는 녹색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2080년대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이상 높아지면 최고 32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세계인구 20% 이상이 홍수위험에 노출되며, 전 지구생물의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는 없다’는 예언이 현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EU와 일본은 저탄소 사

회의의 이행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녹색경쟁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플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인 미국의 토머스 프리드먼은 “녹색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안전, 안보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말함으로써 녹색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

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3대 전략으로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위해 10월까지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부의 3대 전략, 10대 정책 방향에 맞게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녹색성장의 방향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

녹색성장! 광주의 발전전략입니다

래 성장 동력 확충, 시민의 녹색생활화를 3대 분야로 설정하여 5개 자치구와 공사·공단, 유관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솔라시티 건설, 태양광 주택 보급, 청정 및 신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솔라시티센터 및 에너지 기후변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녹색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우리 시가 1970~80년대의 경제

개발시대에 소외되어 낙후되었지만, 잘 보존된 자연자산을 가진 우리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전개되는 녹색성장시대를 기회로 삼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녹색성장 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발 앞서 환경을 생각하였습니다.

광주는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녹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환경도시로 만들었고, 골목 없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인 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광산업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온 결과 정부에서는 2010년에 광주를 R&D특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가 새로운 저탄소 녹색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환경과 성장을 실천해온 광주, 국가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앞장서 극복해온 광주,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사적 위기를 극복해 앞장서 세계 제일의 녹색성장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장〉

은펜칼럼

김병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2009년 6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0만 6884명으로 인구의 2.2%에 달하고 있다. 10년 전 38여명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 추세다. 이미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기초 시·군·구가 32곳이나 되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

율 전망이다. 문제는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식은 배타주의적 순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사회는 ‘순종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한민족의 피에는 본토인, 북방계, 남방계가 섞여 있다는 유전학적 연구

한국의 외래 귀화 성씨는 중국계 외에 도 몽골계, 여진계, 위구르계, 아랍계, 베트남계, 일본계 등이 있어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으로 보기 어렵다.

2006년 통계청이 전국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가장 많은 30.6%가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한국사회의 그릇된 순혈주의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로마제국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잡한 잡종국가의 선물이고, 미국 ‘팍스아메리카나’의 힘도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이브리드문화에서 나온다는 것이 상식이다.

다문화가정은 늘어나는데, 단일민족 신화로는 이들을 깨어낼 수 없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배타적이고, 편협적일 수 있는 단일민족을 강조하기보다는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과 관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민2세대는 그 자체가 소중한 인간 자원이다. ‘다름’과 ‘섞임’을 용인하는 다문화적 감수성이야말로 세계화시대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서강정보대학 교수〉

다문화사회를 위한 제안

율이 6% 이상인 시군구도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 전국에 8곳이나 된다.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3만 명이 넘는다. 특히 전남 영암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8.4%나 된다. 단일 민족사회라고만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사회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를 더욱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 시킬 것이다.

결과와, 고고학적 유물을 통한 연구결과가 단적인 예일 것이다. 또 현재 250여 개의 우리나라 성씨 중 130여 성씨가 중국에서 온 귀화 성씨라고 한다. 귀화 성씨 중에는 덕수장씨, 한양조씨 등 1백만에 가까운 성씨가 두 개나 되고, 귀화 성씨의 유래는 3천여 년 전 기자조선으로까지 소급된다.

광주일보에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킥업을 신는 코너입니다.

“한국은 배낭여행 오지” 오명 질 높은 관광상품 개발 시급

최근에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세계의 배낭족에게 한국은 배낭여행의 오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세계 167개국 배낭여행자 2만여 명이 대상으로 물었더니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호주,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 순이었는데, 이들은 배낭여행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관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한다.

그런데 한국이 배낭여행의 오지인 이유는 열악한 인프라와 단조로운 관광상품을 원인으로 꼽는다. 해외 배낭여행객들에게 우리의 관광여행 프로그램이 단조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광주·전남북 등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다양하고 질 높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배낭여행 시장을 키워야 한다.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일수록 배낭여행객을 유치해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낭여행에 나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북 자치단체에서는 전략적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는 대학생들에게 ‘한국 속의 호남 알리기’ 혹은 ‘한국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배낭여행객에게 호남호남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를 무료로 제공해 배낭여행객이 입거나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다. ▲최유민·광주시 북구 청동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자선정·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F A 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